# 여순사건 추념식 불참·조직 운영 부실…교육행정 '뭇매'

전남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교육감·간부 추념식 불참 집중 질타**

**신민호 위원장 "심히 창피하고 실망"**

**비서실 인력 배치·업무 분장 등 지적**

**학생 복지·교육격차 해소 대책 촉구**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본회의장에서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의 역사 인식과 비서실 조직 운영, 공약 이행 관리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남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남광주시교육감 비서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첫 질의부터 김 교육감의 제78주기 여순사건 정부합동추념식 불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달 19일 순천에서 열린 여순사건 정부합동추념식에 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역사 인식과 일정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감도 추념식에 참석했는데 정작 우리 교육감은 반도체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간부조차 없었다"며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청이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민호 위원장(민주당·순천6)도 "여순사건 교육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면 뭐 하겠느냐"며 "심히 창피하고 실망스러웠다. 교육감이 참석하지 못했다면 부교육감이라도 참석했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진성 부위원장(민주당·동구2) 역시 김 교육감의 불참 경위와 일정 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훈 전남광주시교육청 비서실장은 "일정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그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당시 반도체에 너무 몰입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박정선 의원(민주당·비례)은 광주 6명, 전남 10명으로 나뉜 비서실 인력 배치와 메시지 관리 업무에 5명이 배정된 점을 거론하며 "업무 배분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거나 보고서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업무 분장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감이 두 명이면 비서실이 두 개가 되겠지만 교육감이 한 명이면 비서실도 하나가 돼야 한다"며 통합교육청에 걸맞은 조직 운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고경애 의원(민주당·서구3)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에 대해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제도화와 확대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교직원의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의원(민주당·순천4)은 "학생 안전사고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제 점검 학교 수와 후속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며 학교·학부모·지자체·경찰이 협력하는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생들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수권 의원(민주당·장성1)은 "반도체와 AI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 기회가 일부 학교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농어촌 학생들이 미래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비서실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고 공약과 지시사항의 추진 현황도 명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 송형곤 의장 "재정난에 급식비부터 미뤄선 안 돼"

**169억 지급 지연 비판**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학교급식비 169억원 지급 지연 문제를 비판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일 열린 전남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식비 169억원의 지급이 미뤄진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집행부가 뒤늦게나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급식비부터 미룬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매년 아이들의 밥값을 걱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 예산 721억2천400만원 가운데 169억8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편성 예산의 전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학교급식 중단 우려와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전남광주시는 미편성액 가운데 100억원을 올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5분 발언 3題

## "영암 나불도에 서부권 MICE 거점 조성"

**손남일, 산업·관광 연계 필요성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2일 영암 나불도를 중심으로 서부권 마이스(MICE)·문화·산업 복합거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날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만큼 각 지역이 가진 자산을 연결해 하나의 생활권, 산업권, 관광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불도 일대 영산호 국민관광지는 목포와 영암을 연결하고 무안과 신안, 해남과 강진으로 뻗어 갈 수 있는 서부권의 연결 거점"이라며 "조선·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의와 전시를 인근 산업현장 방문과 역사·문화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배 시장이 당선자 시절 밝힌 서남권 MICE 인프라 확충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때"라며 재생에너지 체험과 미래산업 전시, 기업상담, 인재양성 기능을 결합한 '에너지잡 허브 파크' 조성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서부권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설의 위치와 기능부터 교통과 숙박, 관광 프로그램과 산업시찰까지 하나의 권역계획에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변은진 기자

##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 조성 필요"

**최동익, 4년간 2조원 규모 조성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2일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가운데 활용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5천억원씩 총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초기 자기자본 마련을 지원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마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저리 융자와 마을별 수익 여건에 맞는 상환 조건을 마련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되 사업별 수익성과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기금의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의 자원이 주민의 자산이 되고 그 결실이 다시 농어촌에 돌아가는 자립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 "100억 들인 광주빛그린체육관 3년째 방치"

**한귀례, 수익성 이유 개장 지연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귀례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2일 준공후 3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한 시립광주빛그린체육관의 조속한 개장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0억원을 들여 지은 체육관을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립광주빛그린체육관은 국비·시비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5월 준공됐지만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은 "무등체육관과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운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영 중인데 빛그린체육관만 수익성을 이유로 계속 문을 닫아두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기준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산업단지 전용 체육관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의 이용 수요를 만들어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장 목표 시점 제시와 수요 재조사, 탄력적인 운영시간 및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 /변은진 기자

